

## 외교 망치고 ‘항일’ 외치는 靑, 총선만 보이냐?

성윤모 산업, 日에 ‘수출규제 부당’ 의견서  
靑, SNS로 항일 독려… 외교적 해결 난망  
분쟁 확대면 한국 GDP 8.5% 감소할 수도

7월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입법예고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에 대해 정부는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7월 4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강화조치를 시행한 데 이어, 개정안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분류해 수출 통제를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정부 판단이다.

24일 긴급 브리핑에 나선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일본의 금번 조치는 의심할 여지없이 분명하고 명백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야 하지만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 미흡, 양국간 신뢰관계 훼손 등 일본 측이 내세우는 사유는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특히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우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사전 협의도 없이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의 부당성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성 장관은 “일본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를 통제가 불충분하다 하지만 이는 한국의 수출통제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 기인한 결과”라며 “한국은 바세나르제(WA), 핵공급국 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TC) 등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캐치를 통해 도입 권고지침을 모두 채택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 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고시 등을 기반으로 재래식 무기 캐치를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도 잘 갖추고 있다”면서 “재래식 무기 캐치를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이 한국의 캐치를 통해 제도만을 문제 삼는 것은 명백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차별적 조치”라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국제 규범에 어긋나며 글로벌 가치사슬과 자유무역에 심각한 우려가 된다는 강력한 메시지도 전했다. 성 장관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무역 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며 일본의 금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한국기업은 물론 일본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근시안적인 조치임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유수의 해외 언론과 다수의 전문가들도 국제 분업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과 이에 참여하는 다른



“이 맛에 산다” 23일 서울 송파구 성내천 물놀이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물총을 쓰고 물놀이를 즐기며 한껏 즐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정상윤 기자

국가와 기업들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성 장관은 “이미 시행 중인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근거 없는 수출 통제 강화조치는 즉시 원상 회복돼야 하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역시 철회돼야 한다”며 “공생·공존의 한·일 간 경제협력의 틀이 깨어지는 것을 결코 바라지 않

으며 평등하고 호혜적 자유 무역질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의 경제 제재를 한국 정부가 항일투쟁으로 맞받아치면서 한일 간 감정의 골이 더욱 깊어져 외교적 해결은 더욱 멀어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다. 무역 분쟁으로 확정될 경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최대 8.5%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일 무역

분쟁은 관세부과로 대립하는 일반적 무역 전쟁과 달리 상대국 핵심 산업의 필수 중간재 수출을 통제해 공급망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진단했다. 시장에서는 일본이 반도체 다음으로 수출 규제에 나설 대상 업종이 자동차와 기계 등 나머지 우리의 주력상품을 겨냥할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삼성증권이 관세청의 지난해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해당 산업의 대일 의존도(전체 수입 중 일본 수

입 비중)는 자동차 11.8%, 특수목적기계 32.3%, 일반목적기계 18.7% 등이었다. 이에 비해 반도체는 8.3%이고 정밀 기계는 19.9%였다. 유승민 투자전략팀장은 “조만간 일본은 추가 제재를 통해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올릴 가능성이 크다”며 “대상은 대일 의존도가 높고 국내 수출에 영향이 큰 산업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첫 공격의 타깃이 중공업·고위 기술산업군 중 한국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였다면 다음은 자동차·기계 등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동차·기계 산업은 반도체보다 글로벌 공급 사슬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국제사회 비판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와 정부가 비상상황을 인정하면서 외교부장관은 아프리카로 국무총리는 방글라데시로 순방을 다녀오는 등 정부가 상황인식을 바로 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한다. 우리 정부가 마땅한 대책도 없이 사태를 악화시킨다는 비판도 곳곳에서 터져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문제인정권은 일본이 보복을 강화하도록 사태를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너무 사리에 맞지 않는 언행을 하기에 경제실정은 일본 탓으로 돌리고, 나라를 항일 결사 항전의 분위기로 만들어 총선에 이기기 위한 술책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정도”라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또 “이해와 존중, 상호주의, 이런 원칙으로 큰 대한민국을 보여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종일 기자 pagekwon@meconomynews.com

## “최저임금 또 올려? 주휴수당이라도 폐지를”

내년 최저임금 8590원 확정  
편의점 가맹점주들 부글부글  
협회 “경영 임계점에 도달”

2020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프랜차이즈와 편의점 업계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감소는 아니더라도 동결을 기대했는데 실망했다”라며 “이미 지난 2년 동안 너무 많이 오른 터라 소폭의 상승이라도 실제 부담은 실질 수치보다 몇 배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비판하는 동시에 주휴수당 제도 폐지를 요구했다. 협회는 성명문을 통해 “정부가 저임금 노동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이 그 목적이려면 쪼개기를 양산하는 주휴수당 제도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휴수당을 포함 사용자가 실제 지급하는 최저임금은 올해 이미 1만원을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인건비에 상당히 민감한 프랜차이즈 업계와 외식업 자영업자들도 최저임금 인상이 업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임차료와 원부자재 등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건비가 최근 2년 동안 30% 가까이

올라 이러한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하고 폐점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올해 초 전년 대비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은 정규직 직원을 아르바이트로 전환하거나 피크 타임에만 고용하는 등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쓰는 상황이 발생했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충격이 내년에도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불황으로 인해 외식 프랜차이즈 업계 전망이 어두운 것도 우려를 더하고 있다.

김보라 기자 511139@meconomynews.com

## 기준금리 깜짝 인하… 연 1.75%→1.5%

한국은행, 3년 만에  
추가 인하 여부 주목

한국은행은 18일 한은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연 1.50%로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인상한 이후 줄곧 동결을 유지해 오다가 8개월 만에 기존 기조를 깼다.

한은의 금리 인하 조치는 2016년 6월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당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사상 최저 수준인 연 1.25%까지 금리를 낮췄다. 한은이 깜짝 인하를 단행한 것은 저성장과 저물가 기조가 지속하면서 경기 부양의

필요성이 매우 커졌기 때문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속 일본 수출규제까지 악재가 겹치면서 세계 경제 교역이 위축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여기에 더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말 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한 것도 선제적인 인하를 뒷받침했다.

한은이 예상보다 빠르게 금리를 내리면서 시장의 이목은 추가 인하 여부에 쏠리고 있다. 미국이 이달 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큰 만큼 추가 인하의 부담은 덜 상황이다. 다만, 선제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둔화하던 가계부채 증가세와 부동산 가격 상승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금리를 내리면 대출 이자 등 자금조달 비용이 줄게 되고, 줄어든 부담은 부동산 투자로 이어질 수 있어 부동산시장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한은은 이날 하반기 수정 경제전망도 발표한다. 한은은 통화정책 방향을 통해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2.5%보다 밑도는 2%대 초반으로 예상했다. 이는 시장이 예상한 2.3%·2.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윤희원 기자 ieyoon@meconomynews.com

### Inside

|             |     |
|-------------|-----|
| 희비 엇갈리는 반도체 | ▶2면 |
| 삼성 바이오 논란   | ▶3면 |

